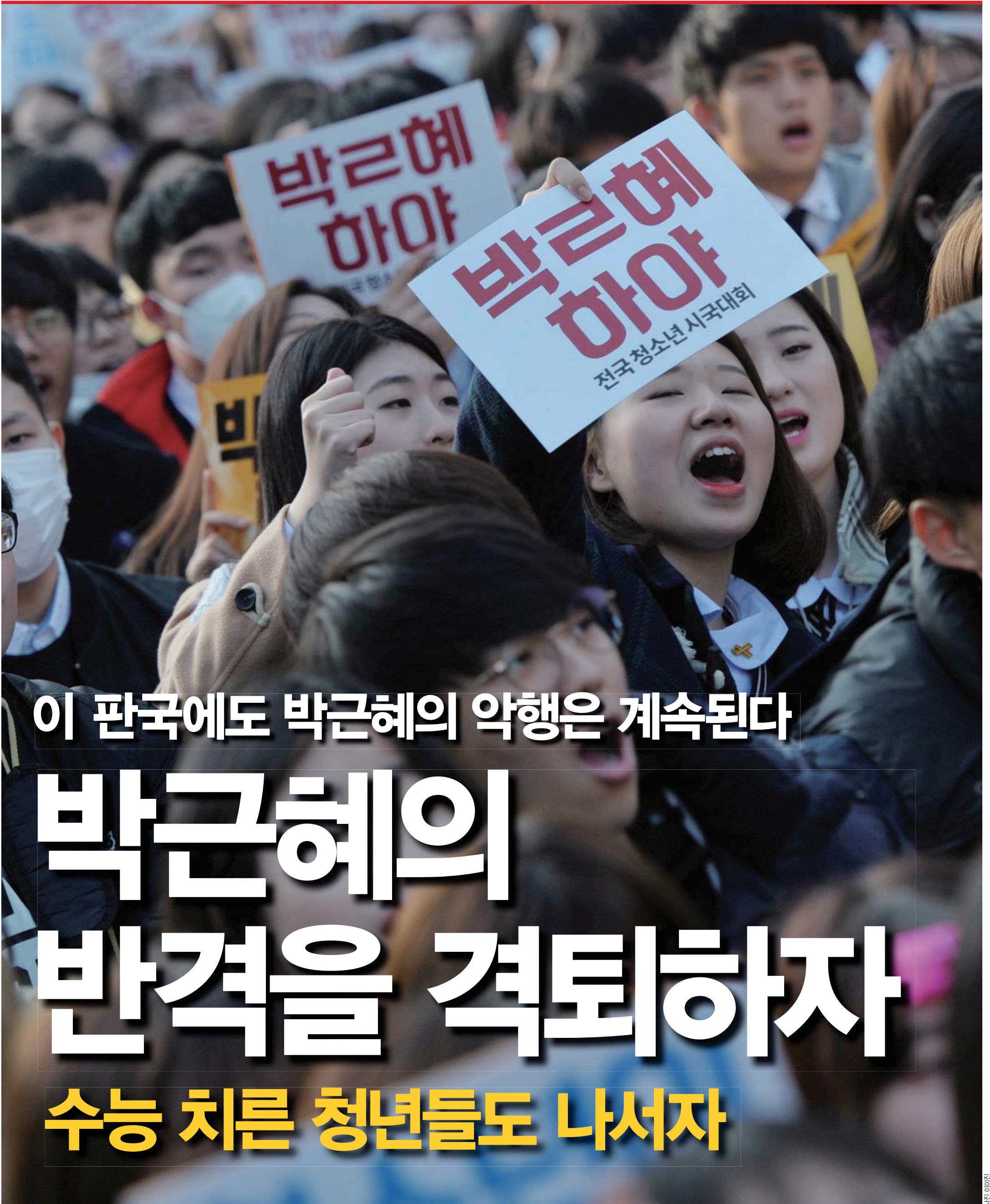




이 판국에도 박근혜의 악행은 계속된다

박근혜의 반격을 격퇴하자

수능 치른 청년들도 나서자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전술들
3, 4, 5면

계속되는 박근혜의 개악

한일군사협정 2면 / 공공요금 인상 2면 / 대학 구조조정 5면
대학 등록금 인상 5면 / 세월호 인양 연기 6면

정유라 입학 취소!
다른 대학의 입학 비리도 뿌리 뽑자
8면

누구의 편입니까?

“수능 끝, 하야 시작”
수능 끝낸 수험생들

“아주 아주 화기에애한 대화였습니다. 미스터 트럼프는 제가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와 만난 아베 신조,
두 꼴통끼리 어렵했겠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전박 변호사 유명하의
눈물샘 자극하기용 거짓말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의 버티기 천명

“[더민주당의] 배후세력이 한국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 중단을 부추기는 좌파 시민단체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또 시작이군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마라야”
“야, 너 나와 봐”
“너까지 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느냐”
최순실이
청담고 체육특기담당 교사에게 한 협박

“그거 다 사용하신 다음에 몇 달 뒤 워싱턴으로 좀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1백만 시위에 등장한 단두대 사진을 본 미국인의 댓글

“여론조사 지지율 10%가 넘기 전에 대권주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정현, 5퍼센트 대통령 감싸려다
제 얼굴에 침뱉기

한일군사협정 강행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박근혜 정부가 기여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퇴진 운동이 부상한 시점에, 박근혜 정권은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꾀하면서 한일군사협정 같은 반동적 조치도 강행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을 강행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미국이 오바마 임기 안에 사드 배치와 한일 지소미아 체결만큼은 반드시 진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사드 부지 협상이 진전되는 등 사드 배치 일정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과, 한일군사협정의 급속한 추진이 맞물린 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일군사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을 미리 막거나 줄여 보자”는 것이다.

결국, MD를 위해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별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북한 미사일이나 잠수함 관련 정보 수집에서 일본 자위대의 능력상 한국 정부가 기대할 만한 군사 정보를 일본한테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일군사협정이 여타의 국가들과 맺어 온 군사정보보호협



박근혜와 함께 한일군사협정도 역사의 쓰레기통에 담아야 한다.

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기다.

지금 한·일 간에 합의된 협정안은 2012년 가서명까지 마쳤다가 중단됐던 협정안과 거의 같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2년의 협정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일본의 무기 개발과 수출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이 향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생산한 SM-3 요격 미사일을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이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고 있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일본과 한국의 군사 협력 수준을 기존과는 다

른 차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기도 하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위안부’ 합의 후에 한·미·일 사이에 “정보·군수·기술 분야의 양자 또는 3자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이 한일군사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그제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집단방위구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후 향후 동북아의 MD 자산들을 통합하는 데서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 군사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한일군사협정이체결되면한국의 자체 미사일방어망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위험해지는 미래

이리 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우려하듯이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작전 상황판을 공유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될 공산이 커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더 위험한 조치들을 불러올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유사시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한일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이 다음 수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일 군사동맹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공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안보법제에 따라 한국 군대가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로·영공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국 정부 요청과 무관하게 미국과의 집단 안보 기치 하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북한을 상대로 작전을 펼칠 때 일본은 한국한테서 군사 정보를 공유받고 더 나아가 공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점에서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협정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사드 배치, 한일군사협정 체결로 한반도를 제국주의 간 경쟁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고 있다. 위험한 미래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그가 추진해 온 각종 친제국주의 정책들도 함께 끌어내려야 한다.

김영익

이 판국에 공공요금 동시다발 인상



지금도 비싼데, 또 올린다고?

이에 따라 지방 상수도 요금도 조만간 오를 공산이 크다. 또, 서울시는 내년 부터 3년간 평균 33퍼센트, 울산시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3~14퍼센트씩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미 올해 1월 전국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1월 보다 23.4퍼센트나 오른 상태였다.

교통 요금도 크게 오른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12월 말부터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천5백 원에서 2천6백50원으로 6퍼센트 올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30킬로미터가 넘으면 5킬로미터마다 1백 원씩 요금이 추가돼, 3천3백50원까지 오른다. 최대 8백50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는 이미 8월에 교통 요금을 1천1백 원에서 1천2백50원으로 올렸고, 대구·부산시도 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정부 교부금을 볼모로 지방세인 주민세 인상도 압박했다. 주민세 징수 실적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주민세를 1만 원까지 인상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동시다발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3백98곳의 부채를 감축하는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개혁파 시장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 동참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필수 공공 서비스인 상수도·전기·가스·교통 등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극구 거부하면서 공공요금을 올려 노동자·서민에게 공공부채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주요 기준이 부채 감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킬 뿐 아니라 박근혜가 추진하는 온갖 개혁도 철회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노동자·서민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공공요금 인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 내야 한다.

강동훈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트럼프 정부의 앞날]
미국과 전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다
- ★ 박근혜, 노동계약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 ★ [철도 파업]
피죄죄한 더민주당 중재인
거부하고 파업을 확대하자
- ★ KT 친사측 노조 위원장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를 규탄한다
- ★ 11월 11일 집회 평가를
둘러싼 논쟁

까면 갈수록 커지는 박근혜의 부패

김문성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가 직접 받아 본 국가정보원의 대응 보고서가 공개됐다. 참사 이후 실제 벌어진 일들과 비교해 보면,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공식 대응을 위해 '채택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시종일관 '여객선 사고'라 지칭한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진상 규명 운동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보고서는 "맞대응 집회 여론전", "지탄 여론 조성"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진상 규명 방해뿐 아니라, '괴식' 시위, '세월호는 교통사고' 막말이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공작정치의 본산이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의 작품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희석시키려고 최순실과 짜고 '해경 해체' 같은 황당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도 박근혜는 7시간 의혹을 감추려고 노심초사다.

이런 공작에 당시 우파가 모두 합심했었으므로, 기업주들과 우파 언론 등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우주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성 우파 정권의 성공은 자본가 계급에게는 더 없는 소망 아니겠는가.

박근혜는 이런 추악한 결탁을 배경으로 권력욕을 만끽한 아비한 통치자일 뿐이다.

박근혜가 미르, K스포츠재단의 건립과 기업 모금을 지시하는 등 부패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가 중심이 돼서 은폐를 지시하고 실행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기춘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운동을 약화시키려고 정치 공작들을 실행한 정황들도 드러났다.

이런 자들이 일부라도 지지층을 복원해 보려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정부와 기업들이 파괴한 세월호 희생자 엄마들의 사생활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한일 양국 정부 모두에게 모욕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무상보육 후퇴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런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과 협상해 거국 내각 총리를 세운다는 게 합당한 기대인가? 박근혜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의 반격

박근혜가 반격을 시작했다. 15일 콜통 검사 출신인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해 검찰 수사를 대놓고 거부한 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 부산 엘시티(LCT)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다. '탄핵 해 볼 테면 해 봐라'는 말도 나왔다.

엘시티 개발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됐고 한나라당 소속 부산시장들과 연루 의혹이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 집안 단속부터 해서 전열 재정비를 해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산 지역 야당 연루설 등을 흘리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정현과 김진태 등이 연이어 망언을 했고 박사모가 19일에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반공 쫓기대회를 여론 조작용으로 이용했던 박정희의 딸다운 발상이다.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해 대규모 동원 집회를 열었던 일도 떠오른다.

그러나 이게 당장은 잘 먹힐 것 같지는 않다. 당장 당황한 검찰이 18일에 박근혜를 범죄 혐의 수사 대상이라고 흘렸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주요한 국가기관이 박근혜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집회에도 수십만 명이 참가할 듯하다. 기세와 규모 모두에서 12일 시위는 성공했다. 그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에서 "새누리당 해체", "탄핵" 같은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근혜는 더는 저자세를 가장한 기만책이 안 먹힐 것 같다는 판단으로 반

격에 나섰을 것이다. 현재 수준의 시위만으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노동개악, 교육 개악 등 온갖 악행들은 멈출 기미가 없다.

박근혜의 반격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낙관적 전망이 최고조일 때 시작했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은 느슨하게 주말 집회만 조직하고 대중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박근혜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퇴진 이후 전망으로 논의를 옮겨가자'는 허망한 낙관론도 위험하다.

그 점에서 정의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가 사임을 선언하고, '사표'는 적절한 선거 일정에 맞춰 낸다는 방안인데 공상이다. 도대체 박근혜가 남 좋다고 자기의 권력을 내줄 성심은가?

게다가 '질서'라는 표현은 결국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사태 해결의 주제로 보기보다는 관리·수습해야 할 상황으로 본다는 인상을 준다. 결국 새누리당(비주류)을 포함한 주류 여·야당에 주도권을 넘기게 돼 정의당의 부상을 도운 거리 운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의당으로서의 자신을 주변화시키는 '수습책'인 셈이다.



반격을 시작한 박근혜



박근혜는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11월 12일 1백만 명이 운집한 박근혜 퇴진 시위.

탄핵 vs 퇴진

운동은 순식간에 강성 우파 정권을 궁지로 내몰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반(反)박근혜 진영도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박근혜를 어떻게 퇴진시킬 것이냐도 그중 하나다. 탄핵론은 박근혜가 버티니 강제로 퇴진시키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국민적 결속을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거리는 거리대로(즉각 퇴진) 각각각층이 할 수 있는 수단을 각자 쓰자는 주장도 있다.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다.

그러나 탄핵론은 퇴진 투쟁의 중심을 거리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우왕좌왕도 못 믿겠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30명 가까이 합류해야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순탄할 리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부패와 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과 손잡고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수다.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도당과 차별화해 손쉽게 재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국회에서 새누리당(비주류)과 합작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해도 또 난점이 생긴다. 진보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시키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사실상 범국민적으로 정서적 탄핵을 선고 받은 박근혜의 임기 중단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 상황에서는 박근혜의 형식적인 위법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압력도 커질 것이고, 검찰은 비협조적일 것이고 운동은 최순실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

사 등에 매달려야 한다. 세월호에서 이미 목도했듯 박근혜와 여당은 다시금 철저하게 방해하려 들 것이다. 지금의 기회를 만들어 낸 거리 투쟁은 주도권을 잃고 국회와 특검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상태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보다 박근혜가 더 바라는 상황이 있을까?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파의 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박근혜 퇴진은 그 진보적 내용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듯 국회 탄핵론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퇴진론은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수단만 다른 게 아니라, 행위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분노한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의 반격을 노동자 투쟁으로 격퇴해야 한다

11월 12일 약 1백만 명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서울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1987년 열띤 거리 항의와 대중 파업으로 당시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민주적 기본권들을 쟁취한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이번 집회와 행진은 민주노총 주최의 연례 전국노동자대회와 맞물려 벌어졌다. 집회와 행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만 명이 참가해 박근혜의 퇴진과 함께 자기들 자신의 요구도 외쳤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외에도 수많은 대중이 여기에 합류해 청와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이날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이전까지 정치 운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을 것이다.

시위대는 결의문을 통해 여성차별 근절과 성소수자 권리도 요구했다. 그동안 박근혜의 시장 지향적 '개혁'으로 노동계급은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와 성소수자를 막론하고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고통을 겪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번 행진에 앞장선 것은 운동이 한 단계 전진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후속조처로서 민주노총 지도자들 측으로부터 명목 이상의 실질적인 파업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라자 박근혜는 반격을 시작했다. 16일(수), 그동안 시간 벌기를 하던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오보를 이유로 채널A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대통령 지지율 5퍼센트는 곧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부산 LCT(이하 엘시티) 비리 수사를 지시했다. 집권당 내 반대파(친이명박계: 이하 친이계)와 제10야당 지도자들 겨냥하는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 김현웅에게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엘시티 비리 사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1백만 집회

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를 명분하고 엄단하라”고 했는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친이계와 민주당 대표 문재인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정말로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는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친이계의

어느 누가 연루됐는지도 아직 모른다. 한국의 사회·정치 구조 자체가 하도 부패해서 친이계의 인사들이 연루됐을 개연성은 꽤 있고, 심지어 문재인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를 했었다.

지금으로선 문재인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지 아닐지 전혀 알 수 없고 운동

에 미칠 영향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어쨌든 박근혜는 ‘아님 말고’ 식일지라도 ‘협의만으로 유죄’라는 분위기를 대중 속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누구든 연루됐을 수도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떨어 먼저 안 나오는 놈 나와 봐’ 하고 정치적 부패의 주도자가 호전적으로 나오면, 그동안 박근혜 퇴진을 시능에 불

과한 수준으로 지지하거나 절반쯤만 지지하던 정치적 경쟁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노동자 연대〉신분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자본주의적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지 정치적 부

패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민중, 특히 그 대다수인 노동계급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낙관하는 희망?

박근혜 퇴진 운동은 믿기 어려우리만큼 빠르게 솟아올랐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에게서 박정희의 그림자를 보며 (그림자였을 뿐인데도!) 두려움을 느끼고 숨죽여 살던 사람들이 권력층 속에서 박근혜가 급속히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을 보며 그에게 도전할 자신이 급속히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퇴진과 함께 다른 이질적인 것들도 함께 요구해, 퇴진 주장을 희석시키고 있으므로, 야당들의 입장이 일관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권 새누리당은 분열했다. 당내 반파라는 ‘질서 있는 퇴진’ 또는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지배계급은 자기네 가운데 대중의 증오가 집중된 몇몇 개인들만을 제거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

지금 지배계급의 일부는 이런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다. 그러나 모든 지배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지배자들은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1백만 시위가 벌어지기 전, 수천 건 설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여 유리한 양보안을 며칠 만에 얻어 냈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노동자 수백 명은 공장에서 도심지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전부터 임금 삭감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가 그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개악 등 각종 개악

을 거의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을 이들은 반기고 있을 것이다.

한편 박근혜를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은 공분만 키울 뿐이다. 지배자들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지배자들의 이런 당혹스런 상황 덕분에 대중의 자신감도 솟구쳤다. 솟구친 속도만큼 낙관도 강력하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전진뿐 아니라 후퇴도 겪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들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당황할 수 있다.

특히, 기층 현장(작업장, 캠퍼스, 지역사회 등에 좌파 조직들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노동자들이 평소에도 상당수 참가한 1987년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시급히 보강돼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 계획은 19일과 26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고 30일에는 비로소 민주노총은 겨우 4시간짜리 ‘수요 파업’을 조직할 예정이다.

물론 30일 전교조 교사들이 상경 투쟁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26일 국민행동 집회는 수도 집중이어야 하고, 민주노총은 되도록 일찍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애써야 한다.

1백만 시위가 벌어지기 전, 수천 건 설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여 유리한 양보안을 며칠 만에 얻어 냈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노동자 수백 명은 공장에서 도심지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전부터 임금 삭감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퇴진 운동은 이 같은 노동자 계급투쟁에 접목되고 기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

고려대: 기업주 수요 맞춤형 미래융합대학 추진

고려대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래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융합대학’은 이화여대의 ‘신산업융합대학’의 고려대판이다. 바로 정유라가 다닌 ‘신산업융합대학’ 말이다.

미래융합대학은 노골적으로 산학 협력을 지향한다. 이 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 교육 전반하는 노동자들의 필요는 뭣으로 밀려나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이 7백50만 원이나 되고 수상 경력과 특기활동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제2의 정유라”를 위한 “귀족 대학”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미래융합대학 설립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그 핵심은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맞춤형 교육’은 대학 교육을 기업의 이윤 추구에 종속시켜,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협애하게 만들어 왔다. 학생들과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필요는 뭣으로 밀려나 있다.

고려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 당국은 미래융합대학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당국은 미래융합대학 관련 설명을 하겠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교수 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장 입구를 가로막아 두 차례 무산시켰다.

학생들은 11월 28일 열릴 학생총회에서 미래융합대학 설립 반대 목소리를 모아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퇴진 위한 행동을 결의하는 것도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이다.

기업 종속, 돈벌이 교육 심화시킬 대학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현주

서울대: 탐욕, 관료주의로 점철된 시흥캠퍼스 추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10월 10일 학생총회를 열고 40일 넘게 분관 정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 당국이 8월 22일 시흥에 새로운 캠퍼스를 세우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시흥캠퍼스 건설 계획은 2009년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했다. 시흥시는 이를 바탕으로 ‘배곧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서는 교육도시’라는 홍보와 함께 서울대병원 본원교, 2천~3천 명 규모의 기숙형 대학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부동산 시

장이 들썩였다. 정부는 공유지를 원가 이하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을 개정했고, 시흥시는 한라건설에 헐값에 땅을 매각했다. 한라건설은 3차에 걸쳐 6천7백 가구를 분양해 큰 이익을 거뒀고, 이 개발 이익 중 일부로 시흥캠퍼스 건물 등을 지어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업과 투기꾼들은 큰 이익을 봤지만 학교 당국은 아직도 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제대로 된 계획도 없다. 돈벌이를 제외하면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

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대강 들어도 부패의 냄새가 솔솔 나는 개발 사업에 학생들이 짐작처럼 옮겨지는 것에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서울대총장 성낙인이 여러 차례 거짓말로 학생들을 속이고는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해 버린 것도 의혹을 키웠다. 당장은 아니어도 새로운 캠퍼스 운영 비용을 위해 등록금 인상 등 학생들에게 비용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최근에는 의무 기숙 계획은 없었던 말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 학생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장호중

민주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어서 운동과 정치(정당)의 관계 문제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근에 던져진 물음은 퇴진행동과 야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때 야권의 실체는 민주당이다. 야3당 중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퇴진행동 참여 단체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박지원)는 견해이다. 결국 퇴진행동과 민주당의 관계가 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12일 1백만 시위를 영수회담 협상에 이용하려면 추미애의 ‘12시간 소동’이 도처에서 엄청난 물매를 맞은 뒤에 비로소 허겁지겁 박근혜 퇴진 당론을 정했다. 까짜 했다가는 “광장에서 돌팔매 맞을 것”이라는 격정에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운동의 막차를 탄 것이다.

그러나 이때조차 박근혜를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는 정쟁으로 남아 있다.



퇴진운동은 민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은 “즉각 퇴진”이 아니다. 그리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이 퇴진 운동에 반격을 가할 시간을 줄 위험이 있다. “탄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 국회의 의식 수

가 부족하고 — 박근혜의 악행에 가담해 온 새누리당 비박계와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목적을 비튼다는 것이다 —,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라는 반동의 보루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탄핵”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국회 안으로 수렴한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 국회의 의식 수

또,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순실 특검’도 역기능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하는 등 구멍이 숭숭하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게다가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착각을 심어 줄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역대급 특검으로 띄우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려서다.

결정적으로, 특검과 박근혜 퇴진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11월 초 민주당은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총리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랬던 민주당이 퇴진 당론을 정한 뒤에도 새누리당과 협상해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총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민주당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지뢰밭으로 끌고 갈 계요

요(第五列)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그 당의 타협주의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독립성

일부 단체들은 민주당이 퇴진행동에 가입하기를 바랐던 모양인데,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권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박근혜를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방식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박근혜를 코너로 몬 것은 대중 투쟁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중 투쟁을 극도로 꺼린다. 그 당의 주된 기반이 (비록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중 운동으로부터 뿔 뚫 있는 비상시국기구 같은 것을 선

호한다. 추미애와 문재인은 야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기구를 제안했다. 이 기구는 박근혜 퇴진 후 모종의 과도 정부를 예비하는 것일 수 있다. 퇴진행동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야당의 종속적 구실을 하게 될 연립 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부가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옹호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동에 큰 해를 입힌다. 그리고 운동이 국가 권력 구조에 윽배일수록 우파의 반동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어느 순간에도 자본주의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퇴진행동의 기조와 방향에 동의하는 한에서 민

주당과 제헌적·부분적 협력을 일철 배척하지는 않겠지만(정치적으로 편협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때조차 민주당의 타협주의에 대해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민

주당이 주도하는 상층 정치 기구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조직적 독립성).

퇴진행동이 전력할 것은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운동을 더 크고 더 깊게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퇴진 운동은 국민적 증오의 대상이 된 한 개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는 매우 다양한 세력과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만큼 운동의 폭이 넓다. 대중성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와 동시에, 퇴진을 거부하며 심지어 반격을 가하는 박근혜를 격퇴시키려면 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박근혜가 추진한 개악들을 철회시키려는 운동들 —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파업, 국정 역사 교과서 철회 투쟁,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 시드 배지 철회 운동 등 — 을 고무하고 그 운동을 퇴진 운동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김인식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행법은 등록금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학들은 대체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그래야 국가 장학금 2유형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가난한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장학금 1유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

으로 시행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가 장학금 2유형의 예산을 큰 폭으로 줄여 왔는데, 이준식은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규제를 없애면 등록금이 해마다 물가인상률의 1.5배씩 인상될 공산이 크다.

즉,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려 하는 것이다.

사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완전히 누더기 상태였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1퍼센트밖에 안 됐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학점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대학생이 학기당 15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2016년 학자금 대출자는

1백만 명에 달한다.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육 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분노가 크게 일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은 화파하면서 대학들에게는 수익사업을 강화해서 알아서 돈을 벌라고 하고 있다. 이준식은 대학의 수익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업처럼 변해 가는 현실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학생들, 노동계급,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폐기할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 계획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정성영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했다.

해수부는 선체 밑 퇴적층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해 5월 해수부의 선체 처리 기술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갑자기 알게 된 변수가 전혀 아니다. 인양 업체를 선정할 것이 그해 7월이었으니 이런 조건에서 인양이 가능한지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우선한 조건은 기술력이 아닌 비용이었다. 유가족들이 상하이 선박비의 인양 방식에 꾸준히 의구심을 품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8월이면 끝난다면 뱃머리 들기도 번번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찢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의 우려가 커져 가는데도 해수부는 연내 인양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런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폭발하는 지금, 인양 연기를 선언한 것이 그저 우연일까? 2년 반을 검은 바다 아래에 있던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를 상기시키는 파장을 낼 것이다. 이는 박근혜



박근혜는 퇴진하고 진실은 인양돼야 박근혜는 최순실, 기업주와는 긴밀했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왔다. 11월 12일 거리 행진 중인 유가족들.

퇴진 운동을 더욱 고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박근혜는 처음부터 세월호를 바다 밑에 묻어버리고 싶어 했을 것이다. 다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 항의 시위로 분노가 결집하자 부랴부랴 인양을 공식 결정했을 뿐이다. 인양 결정 이후에도 기술 검토를 핑계로 시일을 끌었다.

인양 과정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특조위에게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선체에 1백30여 곳에 구멍을 뚫고, 닻 등 주요 부품들을 절단했다. 법원에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해야 할 부품, 즉 주요 증거라고 지적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난 달 해수부는 인양 후 선체절단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유가족들은 미수습자들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를 선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이 방안에 반대했지만 해수부는 막

무가내였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이윤 중심 체제와 부패가 실타래처럼 엉키며 빛은 비극이다. 올해 6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과적된 것이 밝혀지며 박근혜 정부의 미국 패권 독기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음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과 원인, 구조 실패와 진실 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다. 참사 당일 7시간의 진실도 밝혀야 한

다.(관련기사 3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주범 박근혜는 처벌돼야 마땅하다. 2년 전 누더기 특별법 아홉으로도 모자라 ‘공범’ 새누리당과 수사 대상도 불분명한 특검에 합의를 민주당도 도통 믿을 수 없는 세력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인양 운동도 계속돼야 한다.

김지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납입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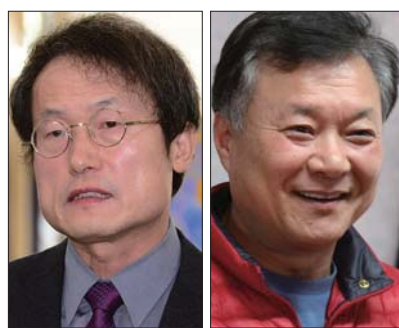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 교사 2명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서울교육청의 징계는 과하다.

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11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세월호 진상 규명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했다.” 벌금형을 초래한 원 행위와 벌금형을 나눠서 판단했고, 벌금형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로 황당한 주장이다.

해당 교사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을 검찰이 끝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무차별 체증을 바



(좌)조희연, (우)이갑용.

탕으로 해당 교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도로교통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로 다시 재판에 세웠다. 결국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벌금 2백5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해당 교사 징계는 세월호 집회 참가에 대한 징계다. 검찰은 악랄하게도 세월호 집회 참가가 확인된 사람은 어떻게든 기소해 세월호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더욱이, 전교조 교사들이 참사 직후부터 적극 동참한 세월호 투쟁이 커지며 서울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덕분에 진보 후보인 조 교육감이 당선할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육감

으로 당선시킨 운동을 방어해야 한다.

‘세월호 교육감’으로도 불리는 조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진보 운동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후 행자부의 보복으로 부당하게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최초 노동자 구청장”으로서 파업 참가자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음으로써 더 큰 해악을 막았다.

지금 서울 교사와 학부모들은 “세월호 집회 참가 교사가 징계받을 때까지 조희연은 뭐했냐”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청 규탄대회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도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조 교육감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세월호 집회 참가 교사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대현

을지대병원·서울대병원 등

기회를 붙잡아 파업해 승리한 병원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기회 삼아 일부 노동조합들은 단호한 투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11월 11일 대전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16일 만에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교섭 당시 ‘파업에 참가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며 할 테면 해보라는 듯이 비웃었지만, 첫날 2백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은 둘째 날 3백 명, 셋째 날 4백 명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병원 업무 전체가 거의 마비됐다. 파업 6일차 노조 소식지에는 “파업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농성장] 공간이 너무 협소해져서 … 하루 종일 불편하고 힘들어도 … 참을 수 있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이 담겼다.

“병원은 공익 사업장이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스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래 파트 조합원들이 전원 파업에 참가했어요. 병동도 10곳 중에 6곳이 완전 폐쇄됐고요. 제대로 돌아가는 병동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파업 막바지에는 재원 환자가 9백 병상 중 2백50명밖에 안 됐어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빼고는 완전히 멈췄다고 봐야죠. 오죽하면 사측이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신문수 을지대학교병원지부장)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은 1998년 사측의 공격으로 노조가 와해된 지 18년 만에 노조 설립에 성공한 데 이어, 첫 파업으로 임금 8.37퍼센트 인상, 체불된 통상임금 3년 4개월치의 50퍼센트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11월 8일 파업 거리 행진 중인 을지대병원 노동자들.

일시 지급, 노조 활동 보장(사무실과 비품 제공, 조합원과 대의원 유급 공가 보장) 등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1998년 노조가 없어진 뒤 우리 임금은 사립대학 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임금 불만이 굉장히 컸고 근로조건도 엉망이었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비정규직이 40퍼센트나 되기도 하고요. 의사와 용역 등을 제외하면 전체 직원이 9백50명 정도 되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3년 동안 6백 명이 일을 그만뒀을까요.”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은 필수업무유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병원 노

동자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투쟁 수단임을 보여 줬다. 특히, 이 파업이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한 상황과 맞물린 것이 노동자들의 승리에 큰 영향을 끼친 듯하다.

마비

한창 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박근혜 부패와 퇴진 운동 소식에 파업 소식이 “파묻힌” 것처럼 보여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주류 언론조차 ‘정부가 멈춰섰다’고 한 상황이 사측에 끼친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며 사측이 양보하

지 않도록 채근하던 정부가 순식간에 마비되자 사측은 갑자기 버팀목이 사라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파업 9일차인 11월 4일 처음으로 병원 밖 집회와 거리 행진을 한 데 이어, 11월 8일에는 ‘대전 지역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행진’에 2백여 명이 참가했다. 11월 9일 을지대병원지부 노동자 4백76명이 연명해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자 파업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연결되는 상황은 사측과 정부를 물러서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 듯하

다. 11월 초까지도 “불법행위를 동반한 파업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교섭을 일절 거부하던 사측은 11월 8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때 ‘성과연봉제 도입 없이는 교섭도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던 보훈병원 사측도 파업 전날 밤 태도를 바꿔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서 11월 1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보다 조금 앞선 10월 25일에는 고대의료원 지부가 파업 예고로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를 좌절시켰다. 9월 27일에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선 지 18일 만에 사측으로부터 “성과연봉제를 내년까지 도입하지 않는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백남기 농민 사망 항의 투쟁이 승리에 도움을 줬을 듯하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보여 줬듯이 조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도 쟁취해야 한다.

박근혜는 위기 속에서도 핵심 지지 기반을 다시 결집시키려 각종 개악(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세월호 진상 9규명 회피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배계급의 다른 일원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각종 개악을 좌절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의 최종 버팀목도 넘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장호중

독자편지

11월 2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의 발빠른 기사들이 크게 도움됐습니다

11월 12일 ‘파주비상시국회의’와 함께 문산에서 출발하는 경의선을 타고 지하철 홍보전을 하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화장실 다녀오기도 힘들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큰 자극과 힘을 받고 돌아왔다. 민중총궐기 참가는 우리의 분노가 힘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줬다. 다만 무대 앞에 자리를 잡은 바람에 오도 가도 못 하고 몇 시간을 줄곧 콘서트만 보느라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파내야 하는지 막막함도 느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찰나에 12일 집회 이후 월요일부터 올라온 <노동자 연대> 신문의 발빠른 새 기사들은 충알을 다시 장전하는 기분이 들게 했다.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추미에 영수회담 추진과 더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는 글, 세종호텔 노동조합 투쟁을 소개하며 성과연봉제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연결하는 글,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맞교환 협상을 비판하는 글을 하루에 하나씩 써서 지역 활동 밴드들에 올렸다.

분석과 방향

지역에서 만나는 일부 활동가들은 마치 박근혜만 퇴진하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저 집회에 나오거나 홍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활동이라고 본다. 또, 더민주당 같은 야당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 국민적 분노의 원천이 무엇이며 박근혜 퇴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



<노동자 연대> 거리 판매대.

인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연대>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지배계급이 분열했고, 지속적인 노동자 투쟁이 이를 심화시켰으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증

폭된 분노의 물결 속에서 노동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 배치 저지 등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맞물려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정세 분석과 방향 제시는 지

역 활동가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쉽게 얼굴을 볼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이 글을 읽고 ‘좋아요’ 반응을 표시하고, 퍼가도 되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

생계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파주주민모임’, ‘이재홍 파주시장 비리 진상규명 공대위’, ‘파주비상시국회의’에서 활동을 끈질기게 이어 가면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인용한 글들을 올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노동자 연대> 신문을 직접 보도록 권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임에도, 잠 못 자가며 토론하고 기사를 작성해 방향을 잡아 주는 <노동자 연대> 신문에 감사한다.

김진희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정선영

11월 18일 정유라 입학 비리에 관한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그간 제기돼 온 정유라 특혜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힘겹게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보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사실을 교육부는 이제야 인정한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은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요했다. 정유라는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면접위원들 앞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았다. 명백히 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짓이었다. 일부 면접위원은 다른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보다 점수가 높은 응시생들의 면접 점수를 깎게 했다.

출석 및 학점 특혜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정유라는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을 수강했는데,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은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했다.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정유라 명의의 답안지가 나오고, 교수가 직접 정유라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정유라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굶은 수준의 허접스런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담당 교수가 “감사합니다”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리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유라 입학 취소와 비리 관련 교수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당국은 하루 빨리 이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 감사 결과는 박근혜 퇴진 운동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이 낳은 성과다. 애초에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시작하면서도 감사 내용을 제한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입학 취

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일 정도였다.

그러나 11월 12일 1백만 명이 참가하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이화여대에서도 학생들이 총회를 소집하는 등 다시금 행동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도 문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부정·비리는 있었지만 교육부와 관련한 비리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천만의 말씀,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이례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몰아준 당사자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주범 중 하나인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김경숙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스포츠 센터의 장을 맡아 예산과 센터 운영비, 김 교수 자신의 연봉 등에서 특혜를 받아 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정유라 비리에 단지 이화여대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교육부가 긴밀히 연결돼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의 비리도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게다가 특권층의 입학 부정, 학점 특혜 등은 단지 정유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의 연세대 입학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송기석에 따르면 장시호는 현대고등학교 재학 당시 3년 내내 대부분 과목에서 ‘가’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최하위권이였다. 그런데도 장시호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연세대에 입학했다.

장시호는 1998년 승마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유라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의 가족 말고 다른 권력자들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정·부패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 평범한 학생들이 입시경쟁에 피말릴 때, 정유라는 돈과 권력으로 온갖 특혜를 누렸다.

박근혜의 폴리페서들을 대학에서 쫓아내자

여러 대학에서 정권의 부정·부패에 연루된 교수들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된 부패 교수 사퇴를 요구하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 김상률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평창동계 올림픽 시설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관 김종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홍익대 학생들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복직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덕은 차은택의 은사로 알려져 있으며, 문체부 장관 시절

국정 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국대에서는 노동자연대 건국대모임이 최순실 학위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당국에게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학 곳곳에 뿌리 박힌 부정·비리를 없애 나가자.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